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pporting Welfare

2021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 삶으로의 진입을 위한 자활사업 경로 찾기

자활사업의 변화와 쟁점

백학영 황명주 박송이



자활사업 변화 단계



자활사업 참여자 전달체계 변화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자활사업 자금 변화



자활사업 내용 변화



자활사업 자리매김

자활사업 변화 단계

법제화 이전

1996년 이전
생산공동체 시기

제도화 단계

1996-2006년
시범사업기 ('96-'99)
제도형성기 ('00-'06)

확장 단계

2007-2014년
제도확산기 ('07-'10)
제도안착기 ('11-'13)

변화모색 단계

2014-현재
제도충돌기 ('14-'17)
제도변화모색기('18-)

자활사업 변곡점과 변화

- **법제화 이전 단계 (1996년 이전)**

- 생산공동체 시기

- **자활사업 제도화 단계 (1996-2006년)**

- **시범사업기 (1996-1999년)** : 법적 근거 없이 1996년 5개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시작, 사회적경제 토대 닦기, 적극적 탈빈곤 정책 모색, 자활사업 법제화(1999), 청소년자활지원관(10개소, 자활후견기관 부설 프로그램, 1997)
- **제도형성기 (2000-2006년)** : 청소년자활지원관(20개/2001, 28개소/2007), 5대 표준화 사업(2002), 자활장려금(2003),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3개소, 2004), 종합자활지원계획(2005),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 변경/규모별 지원(2005, 확대형/표준형/기본형/소규모 · 특화형), 창업자금 지원 실시(2004)

자활사업 변곡점과 변화

- **자활사업 확장 단계 (2007-2013년)**

- **제도 확산기 (2007-2010년)** : 차상위계층 참여 확대(2007),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중앙자활센터 설립(2008), 성과관리형 자활사업(희망리본, 2008), 신표준화사업 모색(2010), 평가지표 확대(2010), 자산형성지원제도 시작(희망키움통장1, 2010), 지역자활센터 247개소로 확대(2010), 정부양곡배송 시범사업(2010)

자활사업 변곡점과 변화

- **자활사업 확장 단계 (2007-2013년)**

- **제도 안착기 (2011-2013년)** : 광역자활센터 8개소 설치(2011), 희망리본사업 확대(7개소, 2011),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2011),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위탁(2011),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2009, 청소년자활지원관 유지), 인큐베이팅 사업 시작(2011, 자활근로와 분리), 정부양곡배송사업 확대(2011) 및 전국자활기업(희망나르미, 2013), Gateway 본격 시행(IAP/ISP 수립,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2013), 자활공동체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1인이상사업자(2013), 희망키움통장사업 확대 및 내일키움통장 도입(2013), 광역자활센터 10개소로 확대(2013),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36개월, 2013), 취업우선지원시범사업(2013. 9-2014. 5) 내일배움카드 활용(참여자교육, 2013, 2012 협의/희망리본참여자)

자활사업 변곡점과 변화

- **자활사업 변화모색 단계 (2014-현재)**

- **제도 충돌기 (2014-2017년)** :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확대(2014), 맞춤형 급여로 변화(2015), 자활사업 의무 참여자 축소, 희망리본사업 고용노동부로 이관(2015), 취업우선지원사업 확대(2015), 자활장려금 종료(2016) 및 재도입(20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2014~), 65세 이상 일반수급자/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가능(2015~), 사회적경제활성화대책(2017), 유형/기능다변화시범사업(2015,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5개소, 인천시 부평구(2개소))

자활사업 변곡점과 변화

- **자활사업 변화모색 단계 (2014-현재)**

- **제도 변화모색기 (2018-현재)** : 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자활급여기본계획, 2018-2020), 취업우선지원사업 개선(2018), 고용센터 의뢰자 자활역량점수 상향 조정(70점/2015-2018)→80점/2018, 2019), 시간제자활근로/예비아활기업(2018), 자활기업활성화대책(2018), 청년자립도전사업단(2018),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19),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2019, 현재 8개소), 근로장려금 확대(2019), 청년저축계좌(2020), 내일키움일자리(2020),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2021),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자활급여기본계획, 2021-2023), 사회적협동조합지역자활센터 21개소(2021), 자립형/사회형 자활기업(2021)

* 사회형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자활기업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자활사업 제도화 단계 (2000-2006년)

< 2000-2006년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

연도	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희망참여자)
		소계	조건부수급자 (의무참여자)	자활특례자 및 일반수급자 (희망참여자)	
2000	65,000	65,000	63,000	2,000	-
2001	149,000	110,000	95,000	15,000	39,000
2002	91,868	72,446	58,714	13,732	19,422
2003	83,981	65,920	49,455	16,465	18,061
2004	112,769	83,344	65,412	17,932	29,425
2005	91,067	63,860	49,725	14,135	27,207
2006	86,795	60,105	47,907	12,198	26,691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 자활사업 참여자가 2002년에 급격하게 감소
 - * 참여자 통계 확인 필요
- 차상위계층의 참여율이 사업단별 30~40% 이내 제한
 - ⇒ 2004년부터는 50~60% 이내로 확대
- 차상위계층 1만 명에 대한 저소득층 집수리와
 무료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 저소득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
- 조건부수급자 참여연령은 확대되었으나 참여자는 축소

자활사업 확장단계 (2007-2013년)

< 2007-2013년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

연도	계	수급자					차상위 (희망)
		소계	조건부 수급자 (의무)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취창업	
2007	87,232	60,258	48,289	11,969		-	27,024
2008	70,489	49,241	42,554	6,687		-	21,248
2009	77,532	55,510	50,193	5,317		-	22,022
2010	77,639	54,044	46,900	7,144		-	23,595
2011	83,710	59,801	48,863	10,938		-	23,909
2012	98,146	77,091	46,919	5,512	6,675	17,985	21,055
2013	109,206	89,555	49,310	5,340	7,905	27,000	19,651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확대 계획.
그러나 참여인원 증가 미약 ⇒ 아래의 조건에 의해 기인함
- 차상위계층 우선 사업참여 후 소득인정액 조사결과 반영
(先참여 後조사원칙)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 판정 : 신규참여자 및 근로판정이
필요한 자
- 시설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 후 참여
⇒ 2011년부터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 없이 참여

자활사업 확장단계 (2007-2013년)

< 2007-2013년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

연도	계	수급자					차상위 (희망)
		소계	조건부 수급자 (의무)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취창업	
2007	87,232	60,258	48,289	11,969		-	27,024
2008	70,489	49,241	42,554	6,687		-	21,248
2009	77,532	55,510	50,193	5,317		-	22,022
2010	77,639	54,044	46,900	7,144		-	23,595
2011	83,710	59,801	48,863	10,938		-	23,909
2012	98,146	77,091	46,919	5,512	6,675	17,985	21,055
2013	109,206	89,555	49,310	5,340	7,905	27,000	19,651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자활사업 꾸준히 증가

- 2007년 87,232명에서 2014년 109,206명으로 증가

- 일반수급자가 2002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

★ **2009년**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함

⇒ **2010년**에 다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가능

⇒ **2011년**에 근로무능력자라도 희망 시 참여 가능

- 급여특례가구원(2010), 시설수급자(2011) 참여

- 2012년 자활사업 예산 전년 대비 12% 증가 (4,763억 원→5,333억 원)

- 자활근로대상자 61천 명에서 66천 명으로 확대

- 차상위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도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대상자에 차상위자가 빠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제한

- 취창업(2012, 2013) : 희망통장1 참여자 --> 참여자 증가 주도

⇒ 전반적으로 차상위자의 참여자가 줄어들

자활사업 변화모색단계 (2014-현재)

- 2015년 7월에 기존 수급자 131만 명에게 자격전환 절차 완료 후 맞춤형 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조건부수급자의 소득·재산 범위가 축소
 - ⇒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 참여대상 범위 확대
 - ⇒ 자활사업의 주요 참여대상이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이들로 축소됨을 의미
- 2020년부터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자활사업 참여 우선순위 폐지**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2021년 연말까지 약 40만 명이 새로운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

자활사업 변화모색단계 (2014-현재)

< 2014-2021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

연도	계	수급자							차상위	기타
		소계	조건부	일반	의료 주거 교육	특례	시설	취창업		
2014	123,622	93,784	48,184	7,976	-	5,357	-	32,267	29,838	-
2015	140,700	99,387	52,873	5,334	2,475	3,703	204	34,798	41,313	-
2016	155,080	100,790	51,340	3,427	4,289	3,684	137	37,913	54,290	-
2017	140,202	69,820	43,841	2,875	6,456	4,846	94	11,708	70,382	-
2018	189,960	98,239	38,491	3,332	7,669	5,110	100	43,537	91,721	-
2019	204,962	104,627	41,132	11,433		7,286	203	44,573	98,069	2,266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 차상위자 2014년 급격히 증가
 - ⇒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만 36개월로 완화
 - ⇒ 타 유형으로 전환 시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 ⇒ 3년 이상 참여한 차상위자의 참여기간 제한을 완화
- 차상위자가 2014년 29,838명에서 2015년 41,313명 급증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한 결과
 - ⇒통합급여체계(최저생계비)에서 맞춤형 급여 전환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
 - ⇒차상위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약 2.6% 증가
 - ⇒소득인정액의 범위가 확대 되었음을 의미
- 2015년 만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참여 가능
- 2017년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자 등 자활근로 중지
- 2019년 일반(시설)수급자 참여 증가

자활근로/자활기업 참여자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자활사업	83,710	98,146	109,206	123,622	140,700	155,080	140,202	189,960	204,962	213,903
자활근로	60,385	53,342	48,002	40,234	40,724	39,150	37,869	39,114	46,640	53,243
(비율)	72.1	54.3	44.0	32.5	28.9	25.2	27.0	20.6	22.8	24.9
자활기업	10,116	8,953	8,629	8,580	7,511	4,662	3,493	3,217	2,263	2,113
(비율)	12.1	9.1	7.9	6.9	5.3	3.0	2.5	1.7	1.1	1.0
자활근로+ 자활기업(비율)	84.2	63.4	51.9	39.4	34.2	28.2	29.5	22.3	23.9	25.9
통장사업 *	-	17,824	26,904	42,411	59,932	81,619	72,928	126,927	135,287	142,451
(비율)	-	18.2	24.6	34.3	42.6	52.6	52.0	66.8	66.0	66.6
자활근로+자활 기업+통장 (비율)	84.2	81.6	76.5	73.7	76.8	80.8	81.5	89.1	89.9	92.5

자료: 보건복지부(2020).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 통장사업은 희망키움통장1,2를 합산, 자활사업 중 생업자금, 취업지원(희망리본, 취업패는 표에 제시하지 않음)

수급유형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020)

	합계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자활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특례 수급자	기타합계
합계	104,414 (100.0)		69,459 (66.5)	7,069 (6.8)	15,860 (15.2)	193 (0.2)	8,227 (7.9)	3,606 (3.5)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16,096	(15.4)	13,939	10	1,497	12	68	570
지역자활센터	42,890	(41.1)	21,506	6,115	8,436	138	5,906	789
자활기업	2,065	(2.0)	637	272	447	1	621	87
사회복지기관	385	(0.4)	220	31	63	0	66	5
시군구직접	42,978	(41.1)	33,157	641	5,417	42	1,566	2,155

자료: 2020 보건복지백서(지역자활센터 참여자(53,243명) 규모 확인 필요)

수급유형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활근로사업 (전체)	53,342	48,002	40,234	40,724	39,150	37,869	39,114	46,640	42,890
조건부수급자	31,160	27,881	22,359	24,233	23,276	20,511	20,435	23,715	21,506
일반수급자	3,880	4,202	3,951	3,108	2,410	1,886	2,334	8,475	8,436
의료주거교육수급자	-	-	-	1,573	2,738	4,007	4,983	-	-
자활특례자	4,383	4,071	3,783	2,662	3,020	4,121	4,394	6,488	5,906
시설수급자	-	-	-	118	99	66	79	182	138
차상위자	13,919	11,848	10,141	9,030	7,607	7,278	6,889	6,925	6,115
기타	-	-	-	-	-	-	-	855	789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2020년 자활근로 참여자(53,243명) 규모 확인 필요

	제도화 단계 (2000-2006년)	확장 단계 (2007-2013년)	변화모색 단계 (2014-)
조건부수급자	- 18세 이상 60세 이하 - 2004년 64세 이하로 조정		- 2016년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 - 2021년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자활급여 특례자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을 초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자	- 2016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가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 - 2021년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자	- 2009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함 - 2010년 다시 참여 가능 - 2011년 근로무능력자라도 참여	- 2015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참여
차상위계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2016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급여특례 가구원	-	- 2010년부터 참가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가구원	- 2016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
시설수급자	-	- 2011년부터 참여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 2016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
18세 미만	- 노동부 자활프로그램 참여 유도	- 2011년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등 역량강화사업 중심으로 배치	- 2015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등 역량강화사업 중심

단계별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변화

제도화 단계 (2000-2006년)	확장 단계 (2007-2013년)	변화모색 단계 (2014-)
- 2002년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 ⇒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과제외/유예 증가 -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참여율 확대 ⇒ 사업단별 50~60%이내로 확대	- 2007년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참여 확대 先참여 後조사 원칙 - 2009년 일반수급자의 참여불가 ⇒ 2010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 2011년 근로무능력 일반수급자도 참여 - 급여특례가구원(2010), 시설수급자(2011) 참여 - 근로능력없는 차상위자 참여	- 2015년 맞춤형 급여 전환으로 차상위자 참여 증가 ⇒ 차상위자의 소득인정액 약 2.6%증가 ⇒ 소득인정액의 범위가 확대 - 2015년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차상위자 참여 - 2016년 조건부과여부는 생계급여수급(권)만을 대상 - 2017년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자 등 자활근로 중지 - 2020년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자활사업 참여 우선순위 폐지 - 2021년 자활근로사업 조건부수급자 우선 선정

자활사업 내용 변화

연도별 자활사업 : 제도화 단계(1996-2006년)

연도	2003	2004	2005	2006
사업	1. 자활후견기관사업 2. 자활근로사업 3. 지역봉사 4. 재활프로그램 5. 생업자금융자 6. 근로소득공제사업 7. 기타 자활사업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지역봉사 3. 자활근로사업 3-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2.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3-3. 광역자활사업 4.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5. 창업지원사업 6. 근로소득공제(근로장려금) 사업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지역봉사 3. 자활근로사업 3-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2.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3-3. 광역자활사업 4.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5. 창업지원사업 6.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7. 청소년자활지원관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지역봉사 3. 자활근로사업 3-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2.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3-3. 광역자활사업 4.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5. 창업지원사업 6.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7. 청소년자활지원관

참조 : 2003~2021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목차를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 / 제도화단계는 지침이 정례화된 2003년부터 기재

연도별 자활사업 : 확장 단계(2007-2013년)

연도	2007	2008	2009	2010
사업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지역봉사 3. 자활근로사업 3-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2.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3-3. 광역자활사업 4.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5. 창업지원사업 6.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7. 청소년자활지원관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지역봉사 3. 자활근로사업 3-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2.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3-3. 광역자활사업 4.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5. 창업지원사업 6.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7. 청소년자활지원관 8.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안내	1.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2. 자활근로사업 2-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2-2.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2-3. 광역자활사업 3.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4. 창업지원사업 5.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6. 청소년자활지원관 7.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안내	1. 자활근로사업 1-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2. 자활근로 매출 관리 1-3. 광역자활사업 2.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3.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4. 창업지원사업 5.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6. 2010년도 희망리본 프로젝트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시행지침 7. 청소년자활지원관 8.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안내
연도	2011	2012	2013	
사업	1.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2. 자활근로사업 3.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4. 자활근로 무료간병사업 5. 자활근로 매출 관리 6. 광역자활사업 7.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8. 사회적응 프로그램 9. 창업지원사업 10.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11. 2011년 희망리본 프로젝트 (자활장려금)사업 12.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 13.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안내	1. 자활인큐베이팅(참고: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총괄) 2-2.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2-3. 자활근로 무료간병사업 2-4. 자활근로 매출 관리 3. 광역자활사업 4.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5. 창업지원사업 6. 2012년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중심 자활사업) 7. 자활장려금(구. 자활소득공제) 사업 8. 희망키움통장 사업(자산형성지원) 9. 2012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계획	1.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운영) 2-2. 자활사업 매출 관리 3.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4.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4-1.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 4-2.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5. 자활 촉진 프로그램 5-1. 자활장려금 사업 5-2. 희망키움통장 사업(자산형성지원) 5-3. 내일키움통장 사업(신규) <별첨>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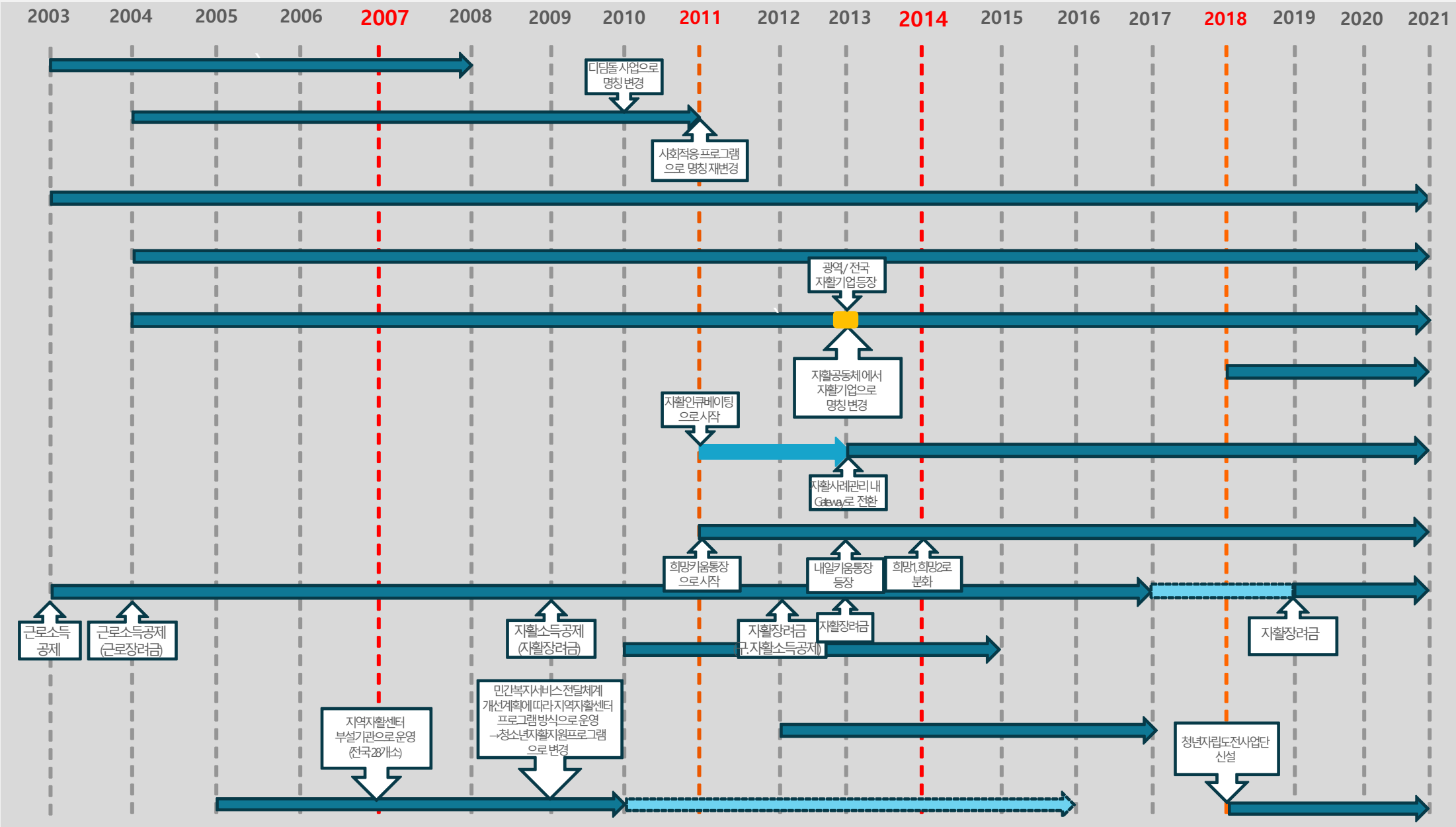
연도별 자활사업 : 변화모색 단계(2014-현재)

연도	2014	2015	2016	2017
사업	1.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운영) 2-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3.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4.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4-1.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 4-2.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5. 자활 촉진 프로그램 5-1. 자활장려금 사업 5-2. 희망키움통장(I) 사업 6. 자활 촉진 프로그램 6-1. 자활장려금 사업 6-2. 희망키움통장(I) 사업 6-3. 내일키움통장 사업 6-4. 희망키움통장(II) 사업 <별첨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별첨2>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1.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운영) 2-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3.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4.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4-1.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 4-2.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5. 자활 촉진 프로그램 5-1. 자활장려금 사업 5-2. 희망키움통장(I) 사업 5-3. 내일키움통장 사업 5-4. 희망키움통장(II) 사업 <별첨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별첨2>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1.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운영) 2-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3.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4.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4-1.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5. 자활 촉진 프로그램 5-1. 자활장려금 사업 5-2. 희망키움통장(I) 사업 5-3. 희망키움통장(II) 사업 5-4. 내일키움통장 사업 <별첨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별첨2>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1.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운영) 2-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3. 자활기업 지원 사업 4.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4-1.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5. 자활 촉진 프로그램 5-1. 자활장려금 사업 5-2. 자산형성지원 사업 6.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연도	2018	2019	2020	2021
사업	1. 자활사례관리 (자산형성사업 함께 수행)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운영) 2-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3. 자활기업 지원 사업	1.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운영) 2-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3. 자활기업 지원 사업 4. 자활장려금 사업	1.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운영) 2-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3. 자활기업 지원 사업 4. 자활장려금 사업	1.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2-1. 자활근로사업(운영) 2-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3. 자활기업 지원 사업 4. 자활장려금 사업

자활사업의 시기별 특징과 주요 사업

	제도화 단계 (2000-2006년)	확장 단계 (2007-2013년)	변화모색 단계 (2014-현재)
특징	- 기본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는 시기 - 사업 내용의 큰 변화가 없음 - 5대 표준화사업 중심 지침 마련	- 이전 시기의 프로그램의 다변화 및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기 - 2007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추진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human service 영역의 사업단이 확대됨에 따라 지침 마련(2008) - 탈수급 및 취창업 성과 강조에 따른 희망리본(2010),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계획이 함께 시행(2012) - 개별화된 탈수급 및 취창업 정책이 강조되면서 자활 인큐베이팅, 자활 사례관리 등장(2012) - (전국, 광역)자활기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시작됨(2013)	<2014~2017> - 탈수급 및 자활성공률과 같은 성과 중심 기조 심화되면서 희망리본과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 정례화 및 전달체계 변화(2014): 근로역량에 따라 자활참여자 배치 - 일부 성과관리형 사업의 통폐합 진행 - 시범형 사업단(pilot) 시행(2013) - 정부 양곡할인사업의 양곡배송사업을 전담함에 따라 공공시장 영역 확보(2014) <2018~현재> - 시간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등 다양한 사업단 개발 및 시행(2018) -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예비자활기업 지원(2018)
주요 사업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지역봉사 3. 자활근로사업 3-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3-2.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3-3. 광역자활사업 4.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5.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6. 청소년자활지원관	1. 사회적응 프로그램 2. 지역봉사(2007~2008) 3. 자활근로사업 3-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3-2.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3-3. 광역자활사업 4. 자활공동체 지원사업(2007~2012) 5.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사업(2013~) 6.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안내(2008~2011) 7. 성과관리형 희망리본 사업(2010~) 8. 자산형성지원사업(2011~) 9.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2012~) 10. 자활인큐베이팅/자활사례관리(2011~) 11. 자활장려금	1. 자활사례관리 2. 자활근로사업 3. 희망리본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으로 통폐합(2014~) 4.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5. 자산형성지원사업 6. 자활장려금(2017~2018년 2년 예산 할당되지 않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재개) 7.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2013~2017) 8. 시범형 사업단(2013~) 8.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등장(2018~) 9. 예비자활기업(2018~)

주요 자활사업 시작과 변화



참조 : 2003~2021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목차를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 하였으며, 지침 기준임.

시기별 사업단 유형 변화

제도화 단계(2000-2006년)

확장 단계 (2007-2013년)

변화모색 단계

(2014-2021)

2003

취로형

업그레이드형 : 시장형, 공익형

2004
~2012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2013
~2018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2018
~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자활인큐베이팅 및 자활사례관리 변화

- 2009년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 2010년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 전담 인력 배치, 2011년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 정례화
- 2012년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 시행 → 동년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을 연계한다는 명목 하에 자활 인큐베이팅과 자활사례관리 분리하여 추진하기로 방향 설정
- 2013년 자활사례관리 본격 운영 : '자활인큐베이팅'은 '자활사례관리'의 개념이 유사하므로 '자활사례관리'로 통합· 운영하고 '자활인큐베이팅'은 'Gateway'로 명칭 변경
-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Gateway 모두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연도에 따라 사업이 조정 및 명칭이 변경되며 사업의 내용도 변화함

연도에 따른 사업내용 변화

사업명	2009	2012	2013
• 자활인큐베이팅('09) → Gateway('13) 지원	• 사업목적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 및 체계적 사업 • 대상: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유형 : 사회적일자리형 • 사업기간 : <u>6개월</u> 이내 개인별 자활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자활계획에 따른 수행 → 자활	• 자활사업 참여 전 경로설정 프로그램 • Gateway 과정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자활사례관리		• 자활사업 참여 전 경로설정을 포함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간에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자활프로그램 연계	

자활사례관리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배치현황('21.1)] **90개소/90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소수/인원	12/12	11/11	5/5	6/6	8/8	4/4	0/0	16/16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인원	3/3	0/0	1/1	7/7	3/3	6/6	7/7	1/1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 현황('20.11)] **148개소/148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소수/인원	27/27	16/16	9/9	11/11	9/9	4/4	2/2	24/24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인원	9/9	1/1	3/3	5/5	2/2	10/10	14/14	2/2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사 배치 현황('20.11)] **142개소/145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소수/인원	18/18	15/15	8/8	8/10	7/7	5/5	3/3	25/2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인원	6/7	4/4	6/6	11/11	6/6	9/9	8/8	3/3

- 전체 지역자활센터 250개소 기준
자활사례관리사 배치 비율은 36%,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 비율은 59.2%
통장사례관리사 배치 비율은 56.8%임
⇒ 사례관리자 수가 0~3명으로 기관마다 다름
- 두 가지 어려움 존재
 - 1) 2014년부터 근로취약층이 대다수 진입하여 사례관리를 할 대상 증가
 - 2) 사례관리자의 근무조건이 대다수 계약직인 경우가 많음.
연속성 있는 사례관리 될 수 없음
- 사례관리자가 개입하는 기간이 담당자(실장, 사례관리자, Gateway 전담인력, 통장사례관리자, 사업단장 등)에 따라 다름
- Gateway에서 사업단 배치 이후 사례관리자가 개입하기 어려움
- 기관 내 사례관리자에 대한 슈퍼비전의 범위가 불분명함

자활공동체/자활기업의 주요 변화 : 자활기업과 예비자활기업

- 2002년에 자활공동체/창업지원사업(주 사업 : 생업자금융자)으로 시작
- 2010년까지 모든 구성원에 대해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면 자활공동체 설립 가능하였으나 2011년부터 70만 원 이상으로 수익금 배분 금액 상승하면서 자활공동체 참여자 수 감소 (2011년 10,116명 → 2012년 8,593명)
- 2013년부터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광역시, 전국지역자활기업 신설). 자활기업은 근로빈곤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의 통로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저로서 역할 기대
(2013년 광역, 전국, 지역 자활기업 1,340개 → 2020년 1,062개)
- 2018년 복지부는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중 '예비자활기업' 사업 계획 발표 및 시행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중 2,400여 개 중 매년 일정한 요건 등을 갖춘 100개 사업단에게 자격 부여하여 자활사업단 운영
 - 자활사업단 운영기간(3년) 중 시장진입을 앞둔 우수 자활사업단(매출액이 사업비 대비 40%이상)을 선정해 집중 지원함
 - 시장형 · 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1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
- 예비자활기업으로 선정되면 참여자 인건비 지원 및 사업비, 시설투자비, 사회보험료 등 각종 혜택 지원

자활기업 현황(2020년 말 기준)



자활사업 전달체계 변화

자활사업 인프라 변화

	제도화 단계 (1996-2006년)	확장 단계 (2007-2013년)	변화모색 단계 (2014-현재)
한국 자활복지 개발원	2000 자활후견기관협회 2006. 1 자활정보시스템 운영 2006. 12 중앙자활센터 법적 근거 마련	2007. 7 자활기관협의체(자활후견기관협회) 2008. 7 중앙자활센터 설립	2015. 5 한국자활연수원 설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 2018. 1 한국자활연수원 위탁운영 2019. 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한국자활연수원 통합) 2020. 2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광역자활 센터	2004 시범사업 시작/3개소(경기, 인천, 대구)	2008 2차 시범사업/6개소 (경기, 인천, 대구, 강원, 전북, 부산) 2009 3차 시범사업/6개소 2010 7개소(서울 추가) 2012. 2 광역자활센터 법적근거 마련 2013 10개소(광주, 충북, 경남 추가)	2014 대전, 충남, 전남, 경북 추가 2019 울산 추가 2021 제주 추가, 광역자활센터 16개소 2018 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위탁운영 시작 2021년 12개소(서울/경기/인천/강원 제외)
지역자활 센터	1996 시범사업/5개소/(명칭)주민자활지원센터 2000 (명칭)자활후견기관 2004 지역자활센터 242개소 2006 (명칭)지역자활센터	2010 지역자활센터 247개소	2015 유형/기능다변화시범사업 시작(사협자활센터 5, 인천시 부평구(2)) 2016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방식 도입(삼진아웃제) 2021 6. 기능다변화시범사업 종료 2021 지역자활센터 250개소, 사협 지역자활센터 21개소(1개소 취소 반영)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1998 고용안정센터 2000 취업대상자 자활사업 2006 고용지원센터	2007 취업패키지지원서비스 2009 취업성공패키지 2010 고용센터, 민간위탁(210개소) 2011 청년/고령자뉴스타트프로젝트, 디딤돌일자리 통합(대상 지속 확대) 2012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배치(48개 지자체) 2013. 9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시작	20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2014 86개소(고용센터 7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 2015 취업우선지원사업 확대(2018 개선) 2018 100개소(고용센터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8) 2020 171개소(고용센터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8, 고용복지센터 30, 출장소 41)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취업성공패키지통합 예정)

자활사업 인프라 변화

	제도화단계 (2000~2006)							확장단계 (2007~2013)							변화모색단계 (2014~)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지역자활 센터 (사협자활)	70	169	192	209	242	242	242	242	242	242	247	247	247	247	247	251 (5)	248 (7)	249 (9)	249 (11)	249 (11)	250 (23)	250 (23)
광역자활 센터 (개발원위탁)	-	-	-	-	시범사업							7	10	14	14	14	14	14 (2)	15 (5)	15 (12)	16 (12)	
					3	3	3	3	6	7	7											

* 자활사업 인프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지자체, 민간위탁기관

2021년	규모유형				지역유형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최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250	50	135	61	4	124	57	69

지역자활센터 지원 방식과 평가

연도	제도화 단계 (1996-2006년)	확장 단계 (2007-2013년)	변화모색 단계 (2014-현재)
지역 자활 센터 평가	2000~2004 정액지원 (센터당 150백만원) 2005 유형별 예산지원 확대형/표준형/기본형/ 소규모특화형 - 참여인원, 사업단수 2006 유형별 예산지원 -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률, 참여자만족도	2010 센터평가 반영 유형별 예산지원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격년제 평가 - 참여인원, 자활공동체지원(수,급여액, 생존율), 자활성공률, 사업단지원성과, 취업지원(취업율, 취업유지율), 교육 및 지역사회자원활용(참여자직무교육이수율, 종사자직무교육이수시간, 외부자원동원) 2012 유형별 예산지원(센터평가와 분리) - 인구, 면적, 사업체수, 수급자 현황	2014 유형평가 3년 주기로(시군구조건부수급자수, 센터참여수급자수) 2015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체계화 공통지표(참여자자활성과/자활기업운영성과/센터운영성과), 특성화지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평가 차별화 2017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2년 단위 평가로 전환 (2017/2018, 2019/2020) 2019 지역자활센터 평가 지표 참여자 자활성과(성공률/교육이수율/인적자본향상/자산형성지원), 사업단 운영성과(사업단 매출향상/사업단관리지원/참여자증가율) 자활기업운영성과(사회적공헌도/관리지원) 센터 운영성과(사례관리운영성과/종사자관리지원/홍보) 특성화지표(외부기관후원연계/지역사회사회적공헌및협력/지역특성화)
광역 자활 센터 평가	-	2008 3개소 평가(3년 실적) 2009 6개소 평가(1년 실적) 2011 7개소 평가(2년 실적) 2012년 이후 1년 실적 평가 계속	2020~2021 평가부터 2년 단위 평가(2022년 시행) 지역자활지원(컨설팅지원/취창업자원연계/교육지원/홍보지원/지역자활센터 활성화지원노력) 광역자활기업규모화및특성화지원(지역특화사업/광역자활기업경쟁력/공공재정 투입연계) 지역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경제관련추진실적/내수거래추진실적) 조직운영(재무회계투명성/조직운영관리/모법인지원)

자활사업 예산

	제도화 단계		확장 단계		변화모색 단계							
연도	2003	2006	200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49,277	265,532	292,046	579,556	549,428	448,075	459,669	434,756	470,850	581,685	710,036	726,133
자활근로 (비율)	120,30	233,720	259,410	409,857	382,798	314,803	327,285	288,061	320,072	389,709	507,810	518,449
	80.6	88.0	88.8	70.7	69.7	70.3	71.2	66.3	68.0	67.0	71.5	71.4
자활지원 센터운영 (비율)	23,062	27,095	27,914	42,094	52,865	50,276	51,412	53,017	55,290	62,148	65,586	68,976
	15.4	10.2	9.6	7.3	9.6	11.2	11.2	11.7	11.7	10.7	9.6	9.5
자활사업 관리	-	-	-	203	190	177	165	165	265	265	265	265
생업자금, 이자손실보전	2,052	1,201	7,200	989	1,160	768	689	99	111	35	22	8
자활장려금	-	21,645	22,300	38,937	25,000	15,000	-	-	-	38,837	7,093	7,944
희망키움 통장	-	-	-	43,475	48,295	55,556	67,847	80,401	82,883	78,090	90,162	91,276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	-	-	8,652	9,474	10,144	10,983	11,626	12,229	12,601	13,659	14,818
내일키움 일자리	-	-	-	-	-	-	-	-	-	-	24,020	24,397

* 단위 : 백만원, 각 연도에서 자활근로 외 자활사업(사례관리, 희망리본 등),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생업자금융자, 자활사업실태조사, 자활후견기관 평가, 기타, 지역봉사 등의 예산을 제시하지 않음

36

자활사업 전달체계 변화 특징

	제도화 단계 (1996-2006년)	확장 단계 (2007-2013년)	변화모색 단계 (2014-)
보건 복지부 자활사업	- 지역자활센터 인프라 적극 확대 (2006년 242개소) - 인프라 확충 노력(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 지역자활센터 지원 합리화(유형별예산지원)	- 자활사업 수행 체계 안정적 구축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평가/성과관리 - 자활사업 예산 확대(자산형성지원사업 영향)	- 자활교육체계 강화(2015년 자활연수원) - 자활사업 수행체계 강화 및 안정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확대/직접위탁) - 자활사업 평가체계 안정화 - 지역자활센터 다변화(유형/기능다변화) - 자활사업기능 확대(사회적경제/자활기업 활성화) - 자활사업 예산 감소(2015-2018) 및 재확대(2019~)
고용 노동부 자활사업	- 취업대상자 중심 자활사업	-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청년, 고령자, 저임금노동자 등 취업취약계층) - 취업지원 체계 및 기능 강화 (지자체협력, 민간위탁, 취업패/취업우선지원)	-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및 안정화 - 고용복지서비스 통합 기능/협력 강화(기관/지자체) - 취업지원제도의 안정화(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사업 기금 변화

자활기금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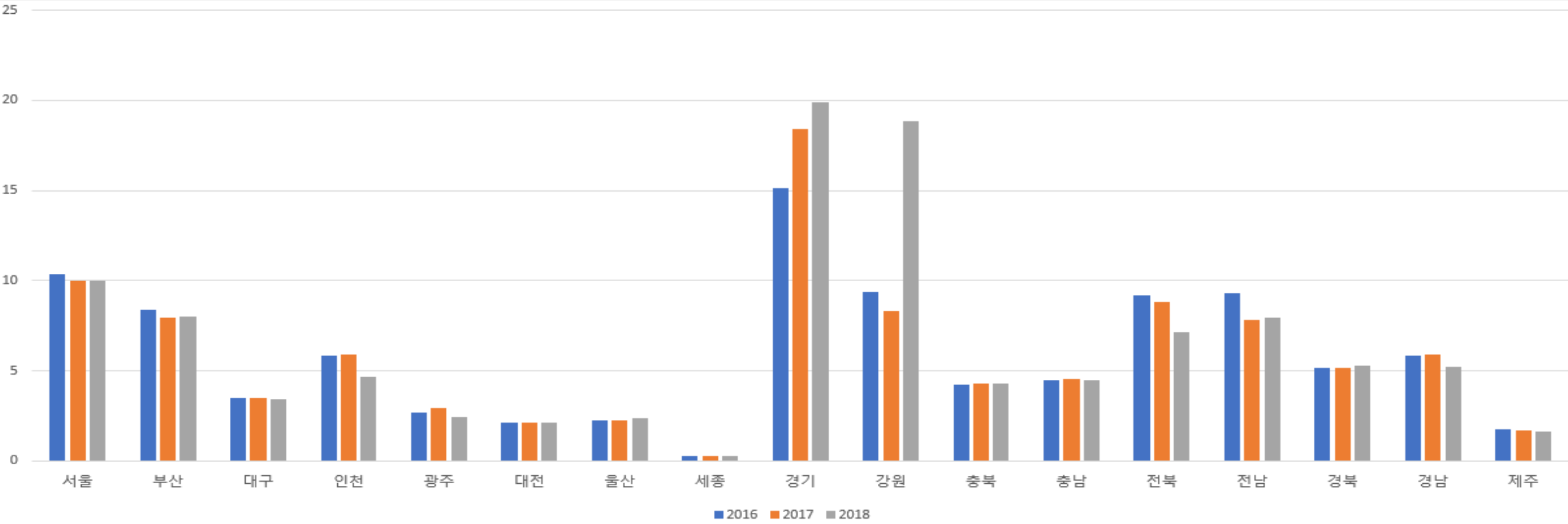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기금을 조성 운용함
- **2001년 정부출연금 25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 말 기준 지자체에서 적립한 자활기금은 약 4,000억 원**
- 정부는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자활기금의 적립 의무화**
- 종전에는 자활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었음
- 자활기금은 지자체의 일반기금과는 달리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근로를 통한 수익금 등의 일부를 공제형식으로 적립하여 조성하는 기금
- 기여자와 수혜자 구분, 자활사업의 활용가능한 자원 확대

지자체별 자활기금 적립 현황

2016		2017		2018	
적립액	적립율	적립액	적립율	적립액	적립율
390,257,608	100.00	397,620,362	100.00	410,975,672	100.00

- 2016년 약 3,900억 원, 2017년 약 4,000억 원, 2018년 4,100억 원으로 매년 약 100억 원 적립액이 증가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0). 자활기금 관리 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자료: 자활기금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2019)

지역별 적립금 추이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019년)

(단위: 억 원, 개 소)

자활기금 조성금액	지자체 수	자활기금 조성금액	지자체 수
0	7(3.1%)	10~20 미만	72(31.6%)
0~5 미만	29(12.7%)	20~40 미만	49(21.5%)
5~10 미만	66(28.39%)	40 이상	5(2.2%)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0). 자활기금 관리 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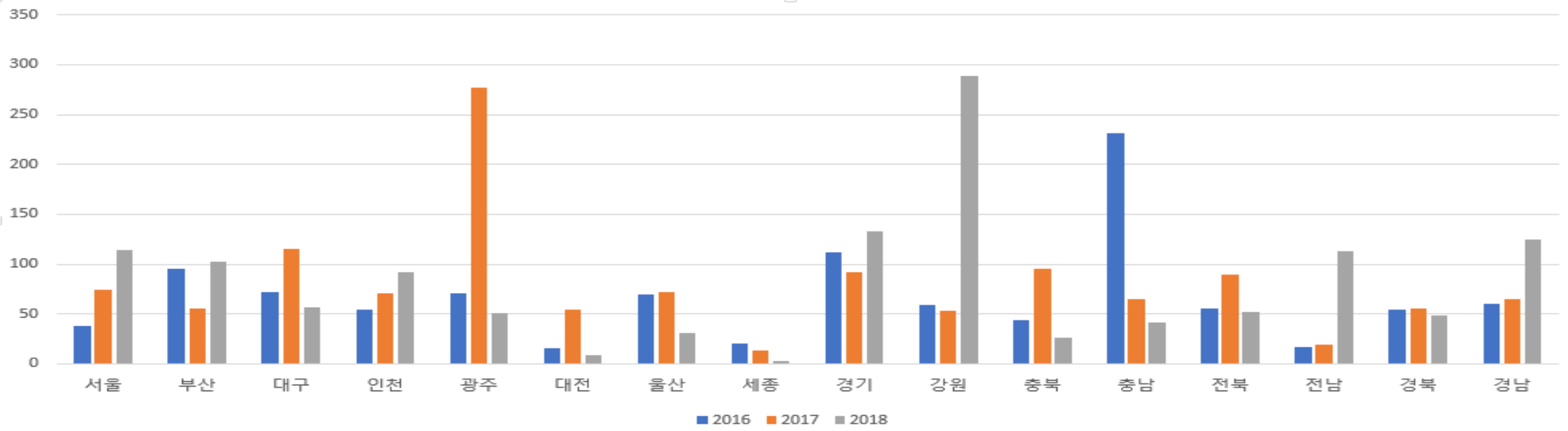
- 2019년 현재 총 243개 지자체 중 1개의 광역지자체와 7개의 기초지자체 등 **총 8개의 지자체가 자활기금을 미조성**
- 「2020년 자활사업안내」에 기금조성 목적달성을 위해 **5억 원 이상의 자활기금을 조성하도록 권장** 하고 있으나 약 29개 지자체가 5억 원에 미달

지자체별 자활기금 집행 현황

2016			2017			2018		
집행 계획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 계획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 계획액	집행액	집행율
28,039,848	16,893,145	60.25	32,965,060	22,989,615	69.74	27,709,871	22,654,402	81.76

- 자활기금을 가장 많이 활용한 지역은 강원도
- 광주시는 2017년도에 집행율이 높았던 반면 2018년에는 집행율이 낮아짐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0). 자활기금 관리 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자료: 보건복지부(2019). 자활기금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지역별 자활기금 집행계획 대비 집행률

자활기금 집행 실적

(단위: 백만 원)

연도	보유액	조성액	집행액	집행률 (조성액 대비)
2001*	53,750	55,475	1,725	3%
생략				
2014	354,153	47,921	33,366	69%
2015	367,203	40,206	27,156	55%
2016	386,276	34,966	16,893	48%
2017	394,137	31,875	23,014	72%
2018	407,482	34,794	20,634	59%
2019	398,385	37,679	36,972	97%

- 2019년 말 지자체의 자활기금 보유액은 계속 증가하여 3,984억 원
- 2001년 조성된 자활기금의 7.4배 규모
- 2014년 이후 자활기금 조성액 대비 집행률 차이 큼
- 2019년 집행률 97%(370억 원)로 상승하였으나, 보유액 대비 집행률은 낮음(9.3%)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0). 자활기금 관리 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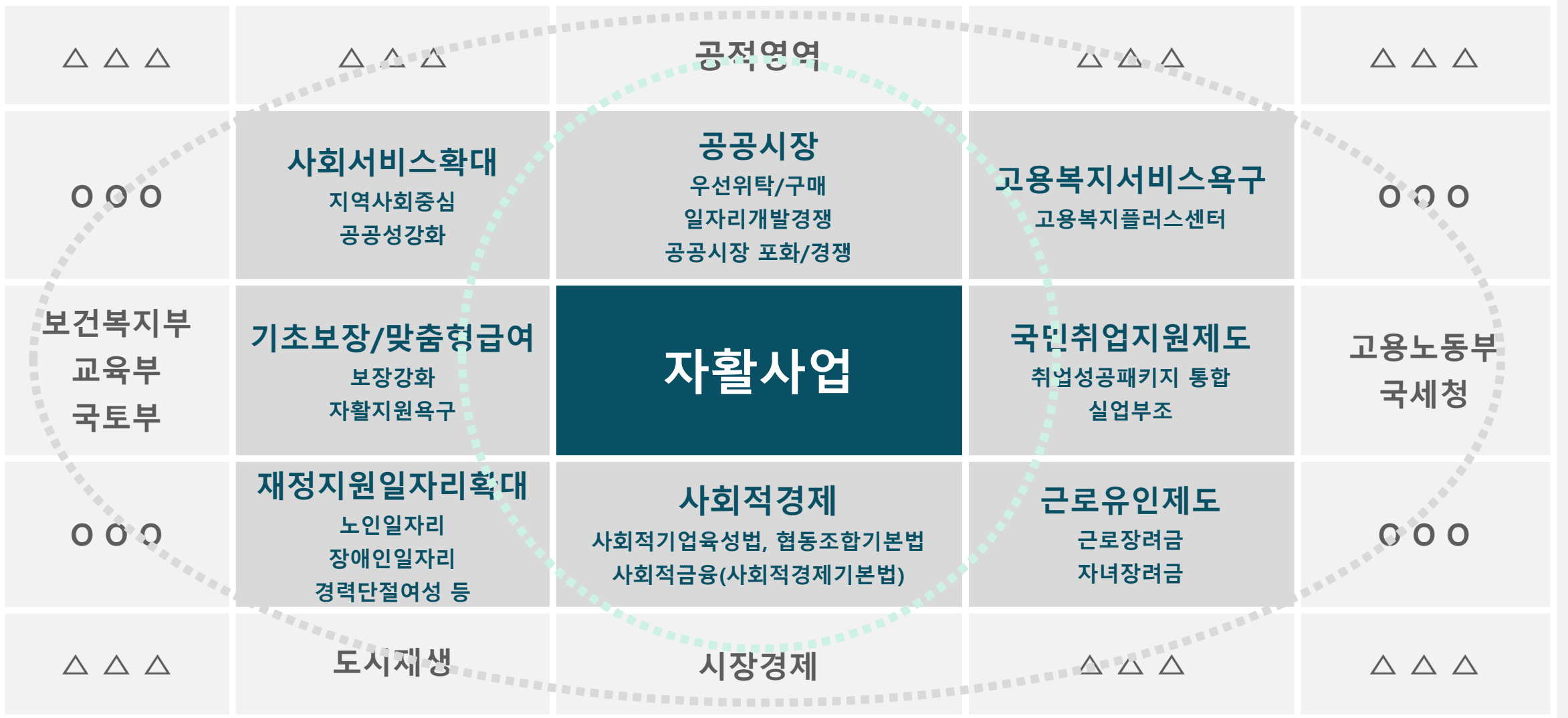
* 2001년도 조성액 55,475백만 원 중에는 국고출연금 250억 원 포함

자활사업 자리매김

자활사업 변화 궤적

	제도화 단계 (1996-2006년)	확장 단계 (2007-2013년)	변화모색 단계 (2014-)
참여자	- 2001년 자활사업 본격 시작 - 제도 정착과 조건부수급의 혼란 - 참여자(조건부수급자) 규모 변동 - 조건부수급적용(의무/유예/예외)과 자활사업 참여자 기준 마련 ▶ 조건부수급제도 정립과 자활사업 참여 기준 마련	-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안정 -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일반수급자/특례수급자/시설수급자/취창업자/자산형성지원) - 자활사업 다양화로 참여자 증가 (자산형성지원) ▶ 참여자 확대 모색 : 소극적(일반.시설수급자)/적극적(자활사업 다양화)	- 근로무능력자(65+)/미약자 참여 증가 - 조건부수급자 감소(2016~2018) - 노동취약계층 참여 증가(차상위, 취창업자) ▶ 참여자 양방향 확대 : 근로무능력자(일반수급자 포함)와 차상위/취창업자
사업 내용	- 자활참여자 복지서비스(사회적응) 지원 및 자활유인(자활장려금) - 공동체창업 지향 ▶ 자활사업 체계화와 표준화	- 자활근로사업단 안정화 - 자활자활사업 규모화(광역/전국사업단)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구축 및 내실화 (Gateway/사례관리) - 자활사업 기능 확대 (자산형성지원/희망리본/취업지원) ▶ 적극적인 자활사업 다양화와 내실화	- 제도의 충돌과 긴장 - 자활사업 위축과 재강화(자활장려금) - 자활 기반 확대(자산형성지원/자활기금활용) - 참여자중심 자활사업 노력(시간제/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지역사회중심 자활사업 노력(지자체/사회적경제) - 자활사업의 사회적가치 확대(자활기업/지역센터) ▶ 변화와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제도적 기능 재정립
전달 체계	-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지역) 및 운영 합리화 - 인프라 확대(광역자활센터) ▶ 자활사업 기반 마련	- 자활사업 운영체계 안정화 - 자활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 지속성장기반(인프라/예산) 구축 ▶ 자활사업 기반 안정화	- 자활사업 기반 확장 및 안정(교육/수행체계) - 자활사업 운영체계 안정(예산/평가) - 자활사업 기능 다변화와 실험(유형/기능) ▶ 자활사업 변화와 재도약 기반 구축

자활사업 자리매김 : 제도적 긴장과 기회



자활사업 자리매김 : 고민과 논쟁거리

- **자활사업의 목적과 방향의 재정립**

- ✓ 자활사업 목적 : 노동의무, 자립지원, 탈빈곤지원
- ✓ 자활사업 대상 : 조건부수급자, 노동취약계층, 서비스취약계층
- ✓ 자활사업 내용 : 노동통합, 사회통합
- ✓ 경제적자활, 정서적자활, 사회적자활
- ✓ 참여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자활사업

- **자활사업의 제도적 위치와 기능 재정립**

- ✓ 국민취업지원제도/노인일자리사업/각종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 ✓ 자활사업 : 정부업무 대행자, 사회적경제 주체

자활사업 자리매김 : 고민과 논쟁거리

- **자활사업수행체계의 내실화**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관계
-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와의 관계
- ✓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운영 체계
 - 지역자활센터의 자율성/지역특성 반영
- ✓ 지역자활센터 운영평가/성과평가 체계

-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성 강화**

- ✓ 자활사업의 사회적가치
- ✓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의 사회적가치
- ✓ 자활기금 운영
- ✓ 자활사업의 다양화
- ✓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자활근로사업단, 신표준화사업, Gateway, 사례관리 등)

고맙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Helping and Welfare

발표내용에 대한 문의
백학영(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white@kangwon.ac.kr)